

영광 방문 이재명 대표 “지도 체제 위기” 배수진

현장 최고위원회·쌀값안정 정책간담회 열어 민주당 후보 지지 호소 “소규모 선거지만 의미 적지 않아...정권에 회초리 들어 책임 물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군수 재선거가 치러지는 영광군을 방문해 “선거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면 민주당 지도 체제 전체가 위기를 겪을 수 있다”며 배수의 진을 폈다.

이날 이 대표의 강력한 발언을 놓고 영광·곡성에서 치러지는 ‘호남대전’ 총력전을 선언한 조국혁신당의 호남 진격 기세가 거세지자, ‘재선거 성적표에 따른 지도체제 위기론’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놓았다는 해석 등이 나오고 있다.

특히 검찰이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1심 선고 일정이 오는 11월 15일로 잡히는 등 사법리스크가 본격화하면서 당권을 지켜야 하는 이 대표에게 이번 재선거는 정치적 명운이 걸렸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영광에서 “소규모 보궐선거이지만 의미가 적지 않다”며 “이번 선거는 군수가 누가 되느냐의 문제가 아닌, 정권에 다시 회초리를 들어 책임을 묻는 선거”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요즘 ‘금융치료’라는 말이 유행인데, 이 정권에는 ‘선거치료’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도민 여러분 입장에서 우리 민주당이 흡족하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동안 기득권 후보 마음대로 정치적 선택을 하는 일이 없지 않았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영광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지역현안인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 지원에 힘을 보탤다.

이 대표가 이날 영광을 찾아 지도부 위기를 꺼내는 강수를 둔 것은 자신을 둘러싼 재판이 연이어 진행되면서 가장 든든한 기반인 호남 표발을 지키려

는 의지로 풀이된다. 자칫 호남에서 혁신당의 지지율이 상승하거나 혁신당 단재정이 탄생한다면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호남 승리를 자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호남 일정을 마친 뒤 25일에는 구정장 보궐선거 지역인 ‘협지’ 부산 금정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부산 최대 사찰인 금정구 범어사 방장 장여 대중사를 예방해 ‘PK 불심’에도 호소할 예정이다.

혁신당 조국 대표에 이어 민주당 이 대표도 호남 정탈전에 가세하면서, 영광·곡성군수 선거도 더욱 가열되는 모양새다.

이날 영광군수 재선거 무소속 양재휘 예비후보는 조국혁신당 장현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선거전 동행을 알렸다. 양 예비후보는 “이번 정책 협약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조국혁신당 입당과 함께 장현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장세일 후보의 동생 장은영(여·민중미래) 전남도의회은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의 진으로 맞섰다.

민주당 영광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장세일 후보의 동생인 점을 들어 제기된 흑색 선전·비방 등이 본선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한 행보라는 게 지역 정치권 분석이다. 장 의원은 “그동안 마치 우리 가족이 어떤 권력을 휘두르는 것처럼 해성 가짜뉴스를 이야기하고 군수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허위 과정 여론을 조성해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다”면서 “영광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와 정권교체의 초석이 되기 위해 백의중군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김해나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왼쪽부터), 장세일 10·16 재·보궐선거 영광군수 후보, 이재명 대표, 조상래 곡성군수 후보가 23일 영광군 영광터미널시장에서 상인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대통령실 “북한, 핵실험 가능성 충분하다”

대통령실은 23일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미국 대선 시점을 포함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그럴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은 핵 소형화 등을 위해 기술적으로 몇 차례 더 핵실험이 필요한 상황이며, 북한 7차 핵실험은 검증되면 언제든 할 수 있는 상태를 늘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의 전략적 유불리를 따지면서 결정할 것이고, 그런 시점이 미국의 대선 전후도 포함되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북한의 핵실험 가능 여부에 대해선 한미가 가장 중점을 두고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에 대해서는 “미 대선 국면 기간에 북한의 핵 위협을 부각함으로써 대내외 관심을 끌기 위한 것으로 분석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신 실장은 최근 야권에서 제기된 ‘통일하지 말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정치권에서 느닷없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며 반헌법적 주장을 하는 데에 대단히 유감스럽고 위험하고 해선 안 될 주장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하지 말자’는 주장을 폈다. 여권은 이를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조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강기정 광주시장, 광주지역 8명 국회의원 등이 23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광주시 당·정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 제공>

민·군 공항 이전 등 현안 예산 확보 협력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시에서 요청한 광주 민·군 통합공항 이전 추진, AX 실증밸리 조성(AI 2단계) 예타 면제-국비 지원 등 지역 현안 사업 관련 예산 확보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민주당은 23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민주당-광주시 당·정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정 국회의원결산위원장, 신정훈(나주·화순)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광주지역 8명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광주시에서는 강기정 시장, 고광완 행정부시장,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이 배석했다.

민주당과 광주시는 이날 광주지역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국비 예산확보 등을 논의했다.

광주지역 주요 현안은 ▲광주 민·군통합공항 이전

추진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AX 실증밸리 조성(AI 2단계) 예타 면제 및 국비 지원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광주실현 ▲국가시설에 대한 지방비 부담 철회(전액 국비 부담) ▲지방교부세 등 제도 개선 ▲주민자치회 운영 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민주당은 광주시가 건의한 11건의 국비 지원 사업과 필수 민생 3대 사업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광주 정책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광주가 경제 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시민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시 예산 전망이 밝지 않아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건의한 사업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주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화순은 새봄에 군민으로 행복하게!

2024

화순 고인돌 가을 꽃축제

2024. 10. 18. 금 ~ 11. 3. 일 17일간

화순 고인돌유적지 일원

http://www.hwasun.go.kr/festival
문의전화 061) 379-3575-7